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1급지’로 정상 추진된다

국비 64억원 증액 확보...예산 부족·규모 축소 위기 면해

전진숙 의원 “건립공사 탄력...나주 원정시험 불편 해소”

광주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운전면허시험장 건립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의 건축 재정 등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사업 진행이 불투명했으나, 내년도 국비를 대거 확보하면서 공사 재개 등 탄력이 붙게 되면서다.

4일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에 따르면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조성 공사와 관련, 내년도 국비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64억원 증액됐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비는 108억6000만원에서 173억원으로 늘게 됐다.

이번 국비 증액으로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광양이나 나주보다 작은 2급지로 규모가 축소될 뻔했던 위기를 해소하고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은 지난 2023년 11월 북구 삼각동 일원(연면적 4만210㎡ 규모)에서 착공식을 갖고 2025년 말 완공에 이어 2026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었다.

착공 당시 시민들은 1997년 광주에 있던 운전면허시험장이 전남(나주)으로 이전한 뒤 26년 만에 다시 들어서는 것에 대해 크게 환영했다.

면허시험장이 나주로 옮겨간 이후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나주까지 이동해 각종 시험과 검사를 받으면서 큰 불편을 겪은 터라 시민들의 기대감은 컸다.

덕육이 전국 15개 시·도에 27개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지만, 광역단체인 광주에만 유일하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다는 점에서 면허시험장 신설은 광주 시민들의 오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조감도

랜 숙원사업이었다.

하지만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공사비와 자재비의 급격한 상승과 ‘건설기 술진흥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 확보된 예산만으로는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또 부지 내 일부 지장물(수목) 소유주가 수용을 거부하면서 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졌고, 그나마 소유주와 협의를 마치고

철거에 나서긴 했으나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 측에서는 추가 예산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사업이 일시 보류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밝힌 상황이었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전진숙 의원은 지난해 총선 이후부터 꾸준히 지역 주요 현안이었던 운전면허시험장 예산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고, 이번 예산심사 과

정에서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증액의 성과를 이뤘다.

이번에 전 의원이 확보한 내년도 증액 예산 64억4000만원은 건축 공사비 부족분 33억5700만원, 감리비 24억3300만원, 농지보전부담금 6억500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는 공사 진행에 필수적인 비용들을 꼼꼼히 반영한 것으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담보하게 됐다.

무엇보다 이번 예산 증액의 큰 성과는 시험장의 규모와 기능을 ‘1급지’로 지켜냈다는 점이다.

당초 예산만으로는 공사비 부족 탓에, 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이 대폭 축소된 ‘2급지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변경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현재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은 행동동(본관·3층)과 시험동, 정비동 등 3개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추가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일부 건물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1급지’에서 ‘2급지’로 변경되면, 면허

시험도 1종·2종·대형면허만 가능하고 제2종 소형(원동기)이나 대형견인 등 특수면허 시험은 불가능하다.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면 광주 시민들은 또 다시 나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이에 전 의원은 기재부와 국회를 끈질기게 설득해 부족한 공사비와 감리비를 확보, 광주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첨단 ‘1급지 운전면허시험장’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 의원은 “예산 부족으로 첫 삽을 뜨고도 공사가 멈추거나, 시민들이 기대했던 1급지 시험장이 반쪽짜리 2급지로 전락할 뻔한 위기가 있었다”며 “정부 부처를 상대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한 끝에 1급지 건립을 위한 예산을 증액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광주 시민들이 나주 등 타 지역에서 원정시험을 진행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1급지 시험장이 완공될 때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빛고를 노인건강타운을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오후 광주 남구 노대동 빛고를 노인건강타운을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어르신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광주 사회서비스원 소속 빛고를 노인건강타운은 지난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식(보건복지부 주최)에서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빛고를 노인건강타운은 2009년 개관한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노인복지시설로, 복지관·문화관·체육관·후생관을 비롯한 종합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현재 8만400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건강한 노화, 활기찬 노년, 모두가 행복한 복지 1번지’를 목표로 건강·활력·배움·나눔이 공존하는 복지공동체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동구의회 ‘통합돌봄 조례’ 개정

정부 지원법 시행 앞두고 재정비

광주 동구의회가 지역 돌봄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광주 동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선화 의장은 정부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발맞춰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번 개정안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통합돌봄 지원 조례’가 내년 초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과 유사한 업무를 포괄하고 있음에 따라,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전면 재정비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복지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를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통합돌봄 지원 대상자를 기존 3800여명에서 7700여명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과 시행, 신청·발굴 절차, 조사·종합판정 과정 등 구체적인 지원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전담조직 구성, 통합지원 창구 설치에 관한 규정을 추가해 지역 돌봄서비스의 운영 기반을 구축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광주시, 맨발걷기 산책로 토양오염도 검사 시행

최지현 의원 지적... 4~10월 73개 산책로 8종 검사

내년부터 광주시 관내 맨발걷기 산책로를 대상으로 정기 토양오염도 검사가 시행된다.

광주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사진)이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맨발걷기 산책로 토양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 광주시가 내년부터 정기적인 토양오염 검사를 공식 실시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감사 당시 “최근 맨발걷기 산책로가 늘어나고 있지만 토양 유해성 관리의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며 정기검사

를 비롯한 표준화된 관리 기준 정비 등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는 후속 조치로 현재 관내에 조성된 73개소의 맨발 걷기 산책로를 대상으로 토양오염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는 매년 시설 이용이 많은 4월부터 10월까지 시행하며, 자치구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한다. 또한 새로 조성되는 산책로의 경우 준공 전 반드시 토양 오염도를 확인해 기준에 부합할 때만 개방하도록 했다.



검사 항목은 토양 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카드뮴, 구리, 납, 비소, 수은, 6가 크롬, 아연, 니켈 등 중금속 8종을 기본으

로 한다.

최 의원은 “맨발걷기 산책로는 시민의 일상 속 휴식공간으로, 흙을 직접 밟고 자연을 느끼는 공간인 만큼 안전성 확보는 무엇보다 기본이 되어야 한다”며 “광주시가 실제 이용 현황과 검사 결과를 반영해 세심하게 관리한다면 시민들께서 더 안심하고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전남도청으로 고향사랑기부하면 ‘K김’ 추가”

10만원 이상 기부 2000명 전남산 김 증정 이벤트

전남도가 연말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대와 지역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슈퍼푸드 케이(K) 김을 활용한 대규모 연말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기부문화 확산뿐 아니라 세계가 사랑하는 전남 케이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31일까지 전남도청에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 후기를

작성한 선착순 2000명에게 전남 고품질 김을 추가로 증정한다.

이벤트는 기부 후 고향사랑e음에서 답례품을 주문해 수령한 다음 후기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신청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 22개 시군은 3년 연속 1위 달성을 위해 10만원 이상 기부자를 대상으로 답

례품 증량과 기프트콘, 지역 특산품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는 또 시군과 함께 5일 도청 1층에서 ‘제1회 전라남도 고향사랑 기부의 달’ 행사를 개최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이 제공되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금은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된다. 이현규 기자

박우량 전 신안군수 ‘햇빛연금투쟁기’ 출간

신재생에너지정책 추진 과정·갈등·성과 등 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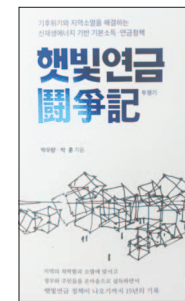
박우량 전 신안군수(사진)가 재임 기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햇빛연금’ 정책의 취지와 정책실현 과정에서의 갈등 등 정책투쟁의 기록을 담은 신간 ‘햇빛연금투쟁기’를 출간했다.

이 책은 신재생에너지정책을 둘러싼 지역사회 논쟁, 중앙정부와의 조율, 이해관계자의 갈등, 정책실현 과정의 압박과 난제들을 솔직하게 담아낸 국내 첫 기록물로 평가된다.

박 전 군수는 신안군의 ‘비교우위’ 자연인 태양과 바람을 활용한 태양광, 풍력사업을 지역주민의 지속 가능한 소득으로 전환 시키기 위해 이른바 햇빛연금모형을 제시해 왔다. 주민이 발전사업의 배당을 통해 매달 연금처럼 혜택을 받는 구조로 농어촌 고령화와 지역소멸위기극복, 소득불균형 등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 받았다.

저서에는 14년간 추진해온 대규모 에너지사업을 둘러싼 중앙정부·지자체 간의 권한 충돌, 지역주민의 우려와 기대가 혼돈된 민심변화,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언론프레임과 정치적 압박, 투명한 이익배분 모델을 위한 제도화 노력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박 전 군수는 “‘100년 동안 안되는 일에 맞선다’는 신념으로, 의사결정 배경과 내부 논의 정책의 성공·실패 등 크고 작은 당시 상황을 꼼꼼히 정



리했다”고 소개했다.

저서에서는 햇빛연금정책이 단순한 에너지 사업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려 했던 ‘생활형복지정책’이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박 전 군수는 “신안의 자연이 만들어 내는 에너지는 오로지 군민의 자산이어야 한다는 신념이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며 “과정은 고단했고, 때로는 외로웠지만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후대의 공공정책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믿었다”고 말했다.

‘햇빛연금투쟁기’는 중앙·지방정부,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과 조정 또는 진sil 그리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은 일종의 정책 회고록이다.

그는 책 발마에서 “신안이 걸어온 길은 앞으로 대한민국 농촌이 나아가야 할 미래 모델이다”고 강조하며 이어 재명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열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

‘구정과 무관한 질의’ 김옥수 서구의원, 공식 사과

구의회, 품위유지 의무 위반...출석정지 30일 의결

김옥수 광주 서구의회 의원이 김이강 서구청장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며 고개를 숙였다.

4일 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김옥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이강 청장에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월23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 서 김 청장에게 구정(區政)과 무관한 개인·사적 사안을 공개 질의하는 등 적절치 않은 발언으로 논란이 빚었다.

이후 서구의회는 지난 1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출석정지 30

일’ 징계안을 의결했다.

또 이미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안이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을 다시 평가할 사유가 아니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개인 가정사에 대한 상황과 실제 진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과도한 발언을 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누가 이런 제기를 한다면 오히려 내가 만류할 것이다”고 사과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징증의 과정과 절차에 대해 애초에 나쁜 의도나 음해의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김이강 청장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한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윤용성 기자 yoi404@